

# 개혁사회주의의 미시적 기초\*\*

張 慶 變\*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개혁사회주의의 미시적 기초<br>와 장애 |
| II. 미시적 행위와 관계의 거시<br>현상화 | V. 거시적 조건과 제약              |
| III.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 VI. 결론                     |

## I. 서론

그동안 사회과학 일반에서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사회관계 및 행위에 대한 연구가 서로 분리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한 학문적 설명이 부분화되거나 불완전해지는 경향이 심화되었다.<sup>(1)</sup>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최근 거시적 현상과 미시적 현상을 한 가지 분석틀을 사용해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도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시적 사회현상이 구체적 개인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또 그들의 미시적 사회행위와 관계들에 의해 어떻게 거시적 사회구조로 재생산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이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격려하여 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趙明翰 전 소장님과 연구 과정에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黃秀益·李天杓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 20세기의 사회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3세계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관한 심리적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사이의 대립이 꼽힐 것이다. 제3세계 저발전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관해, 러너(Daniel Learner), 인켈레스(Alex Inkeles) 등 심리적 근대화론자들이 해당 지역민 개개인의 전근대적 심리상태라는 초미시적인 측면을 주목한 데 대해, 프랑크(Andre Frank), 산토스(dos Santos) 등 종속이론가들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국 사이의 (신)식민주의적 착취관계라는 초거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러한 종속이론적 설명은 다시 에반스(Peter Evans) 등 북미 실증주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다시 미시행태론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

활발하다.<sup>(2)</sup>

이같은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거시적 변수와 미시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균형적으로 인식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거시적 변수와 미시적 변수가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 뿐 아니라,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하거나 미시적 현상의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에 관한 연구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의 사회과학의 경향은 거시적 사회현상과 미시적 사회현상을 별개 차원의 탐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관련된 연구활동도 서로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 주류였다. 그 결과, 여러 학문 사이 및 각 학문 내부에서 필요 이상의 영역 분절이 이루어지고, 연구 전문화의 미명하에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과편화되는 문제마저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을 거시적 차원에서 출발하든, 미시적 차원에서 출발하든 다른 차원으로 연결시켜 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하는 작업과 미시적 현상의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각각 미시 결정론과 거시 결정론에 의존 할 필요는 없다. 거시적현상은 사회 전체나 각 집단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적 또는 구조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사회관계나 행위로 실현되지 않고서는 존재성을 가질 수 없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관계나 행위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미시 결정론적 시각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시적 현상의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을 분석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그 현상에 대한 전적으로 거시적인 설명을 도출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미시적 현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에는 관련된 사회관계나 행위의 특수성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야기되는 현상의 다양성과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조건이나 원인에 대한 탐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사회학적 입장에서 탐구한다. 이 때 미시적이라 함은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의 제한된 효력을 갖는 행위와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고, 거시적이라 함은 분석 대상인 사회적 단위 전체에 대한 효력을 갖는 행위·관계·상태를 지칭한다.<sup>(3)</sup> 그런데 미시적 기초

(2) 예를 들어, Alexander, Giesen, Münch, and Smelser eds.(1987): Huber ed.(1991): Collins(1981: 1992): Giddens(1979: 1984): Mayhew(1980: 1981): Hilbert(1980): 김용학(1992). (구)사회주의권의 개혁에 관련한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 분석에 관한 예로, Rose(1993).

(3) 거시와 미시에 관한 다양한 개념화의 예로 Münch and Smelser(1987:356-357) 참조.

에 대한 탐구는 비록 이론적 설명에 있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심리주의(psychologism)’에 내재된 것과 같은 미시 결정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sup>(4)</sup> 이는 또한 개인 차원의 현상학적인 ‘생활세계(life-world)’를 독립적인 분석대상으로 삼는 가芬컬(Harold Garfinkel)류의 민속지적 방법과도 구분된다.<sup>(5)</sup> 필자의 입장은 오히려 거시적 사회현상이 미시적 사회관계와 행위들의 결합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의 규칙성이나 유형을 밝히는 ‘분석적 구조주의(analytical structuralism)’에 근거한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미시적 행위와 관계가 거시적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변화되는 측면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밀즈(C. Wright Mills)가 주장하는, 생활세계의 개인 수준의 의식을 넘어선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포기하는 작업이 아니다.

미시적 기초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사회관계와 행위 유형의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다. 거시적 사회현상을 미시적으로 실현시키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rational actor)’임이 인정되지만, 그들의 합리성은 주로 그들의 독특한 존재구속성과 인식구조에 의해 구성되는 구체적 의미를 통해서만 이해된다.<sup>(6)</sup> 따라서 합리적인 행위는 오직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뿐이며 특정한 가치기준에 의거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sup>(7)</sup> 물론 특정한 사회체제하에서 또

(4) 심리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구분에 관해 Wippler and Lindenberg (1987: 140-142)의 논의 참조.

(5) 필자의 입장은 이 방법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차원의 상징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거시-미시 현상의 연계에 있어 민속지적 방법의 위치에 관한 논의로 Hilbert(1990)를 참조.

(6) 합리적인 행위자의 최소한의 조건은 자율적인 의식세계를 유지하여 무의식적 심리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것이다(Elster, 1990:22). 이 때 자율적인 의식세계는 사회적으로 체득된 문화적 인식도구들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다(Alexander, 1987: 313). 따라서 행위 합리성은 베버(Max Weber)적 ‘이해(Verstehen)’ 또는 이를 발전시킨 기어츠(Geertz, 1973)의 집단민속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사이먼(Herbert Simon)이 ‘상대만족(satisficing)’의 개념을 통해 지적하듯이 행위를 위한 정보의 접근 및 이해 차원의 제약도 존재구속성에 의한 합리성의 상대화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Elster, 1990:42-43).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지역적·사회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대중의 의식세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합리성에 대한 실증주의적 이해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회학에서 제시되는 합리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기든스(Giddens, 1987:227-229)의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의 핵심적 행위 및 질서 원리로서의 합리성의 성격과 한계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으로 Karen S. Cook and Margaret Levi (eds.), *The Limits of Rationality*(1990) 참조.

는 역사적 환경에서 다수의 사회성원들이 갖는 보편적 존재조건이나 인식구조가 있어서 여기에 기초한 행위 합리성을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거시 현상들의 미시적 기초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객관화된 행위 합리성을 도출할 수 있지는 못하다. 이같은 면에서, 본 연구자의 입장은 경제학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의 개별적 효용 극대화(individual maximization)의 합리성에 기초하지는 않는다.<sup>(8)</sup>

이같은 입장에서 본고를 통해 그 미시적 기초가 분석될 거시적 사회현상은 이른바 국가사회주의 체제(state socialist system)의 개혁이며, 구체적으로 중국 농촌의 상황이 설명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개혁은 나라에 따라 정도와

(7) 이와 관련해 앞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의 대립의 예로서도 언급된 근대화론적 서구 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할 수 있다.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한 때를 풍미했던 근대화론은 서구 자본주의 진영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문화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의 표현인데, 시장 상황(market situation)에 충실한 개인적 합리성(individual rationality)을 이념형(ideal type)을 넘어서 현실적 보편형으로 설정했다. 모든 사회적 상황을 개별적 이윤 추구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기적인 행위 및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최선의 자유·복지 증진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배치되는 다른 문화권의 행위 및 관계 원리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저발전의 원인으로 매도당했다(예를 들어, Inkeles and Smith, 1974). 이러한 시각이 서구 지배하의 제3세계 상황에 적용되면, 결국 과거의 식민주거나 현재의 신식민주의가 변호되는 결과가 된다. 종속이론 등 이른바 구조주의적 제3세계 연구에서 한동안 미시적 행위나 관계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철저하게 거시적 변수들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이같은 근대화론에 의한 미시적 현상의 왜곡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다.

(8) 사이먼(Herbert Simon)이 지적한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하는 경제학적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예를 들어, Akerloff 1970; Akerloff and Dickens, 1982). 나아가 본고와 같이 실린 논문 속에서 이천표 교수(1994)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아 이기적이라고 보는 경제학의 사람에 대한 시각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없는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 …… 결국 경제학에서의 개체에 대한 인식방법은 잘못된 것일 수 있으며, 이렇게 잘못된 인간관을 가지고 개체를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사회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 경제학에서의 낙관론과 그것의 근저에 있는 미시적 기초는 경제학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아집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 theory)’에 대한 사회학적 평가의 하나로 Giddens(1987) 참조.

특히 아래에 다루어질 중국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개혁이라는 근본적 체계전환(system transition)의 상황은 경제학에서 전제되는 개별 행위자의 한계적 상황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정한 경제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기초로 한 한계적 합리성은 체계 개혁의 와중에서 좀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는 종합적 합리성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적 경제활동의 허용과 시장 기제의 도입이라는 자유주의적 지향성(liberal orientation)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개혁은 그 정의상 다양한 비국가적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행위와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제고시킨다. 반면에 과거 중앙지령경제(central command economy)에 일반적이었던 정치적으로 사전 결정된 거시적 경제지표들의 관료주의적 통제를 통한 실현 방법은 점차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유도한다.<sup>(9)</sup> 물론 개혁 자체가 실용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거시적 목표를 갖고 시도하는 것이지만 개혁의 구체적 과정은 더이상 거시적 정책 결정과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sup>(10)</sup>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확립으로 불리는 사회주의 체제의 실용주의적 개혁은 특정한 유형의 비국가적 경제 조직 또는 행위자들이 형성되고 이들로부터 특정한 방향의 행위와 상호관계가 도출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장경섭, 1993b). 거시적 경제 통제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국가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민간경제)에 대해 교육, 홍보, 지도, 유인체계 제공 등 다양한 간접적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치적 강제와 행정적 통제에 의존한 정책목표의 직접적 실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조직, 제도, 사회관계 가운데 국가의 거시적 정책목표 실현에 이로운 요소들을 찾아내어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다양한 비국가적 경제주체들이 추구하는 미시적 합리성 속에서 국가경제 운용상의 거시적 합리성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농촌의 경우를 보면, 1978년말에 邓小平 주도로 개혁이 공표된 후 人 民公社가 해체되고, 농업생산과 사회보장 등 농민생활의 핵심부문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원리가 농민들의 사적 활동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즉 당-국가(party-state)에 의해 주요한 정치·경제·사회 활동의 원칙이 정해지고 또 이에 따라 사회변동의 기본방향이 결정되던 상황에서 농민들의 '자발적' 행위와 사회관계에 의존해 경제 및 사회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 개개인이 현재 중국 농촌의 정치·사회·경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이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관계와 행위를 통해 대응해 나

(9) 중앙지령경제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 설명으로 Kornai(1992) 참조.

(10) 이같은 사실에 기초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해 거시-미시 연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 외에 국가-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자주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Rosenbaum ed. (1992): 장경섭(1993b).

가며 또 국가가 이러한 미시적 차원의 현상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중국 농촌의 거시적 사회·경제 발전의 방향이 정립되고 변화되어 갈 것이다.

부연하면, 비록 중국 농촌에서 人民公社 체제의 폐지는 北京의 국가지도부에 의해 기획되고 유도된 성격이 강했지만, 탈집단화 이후 농업생산, 농촌산업화 및 도시화, 노약자 부양, 인구 변화 등의 영역에서의 사회현상의 전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 자신의 미시적 행위와 사회관계의 원리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받고 있다. 국가는 비록 이러한 변화를 자체적으로 유도할 능력은 없지만 농민들의 미시적 행위와 관계의 성격이 거시적 정책목표의 실현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편다. 따라서, 실용주의 정권은 적어도 개혁 초기에는 토지분배정책, 인구이동정책, 산업구조정책, 사회복지정책, 출산관리정책 등을 통해 농민들 자신의 행위와 관계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긍정적 사회개입(positive social intervention)’ 전략을 유지했다.<sup>(11)</sup> 물론 이같은 국가 전략이 전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농민들의 일부 미시적 행위와 관계는 집단적으로 누적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중국 농촌은 개혁사회주의가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되어 온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 Ⅱ. 미시적 행위와 관계의 거시현상화

한 사회가 전체주의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한 다양한 사회성원의 행위와 상호관계의 양태를 자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그 행위와 상호관계의 결합에 의해 나타날 거시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사회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으로 특정한 역사·사회적 상황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되는 행위와 관계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 행위와 관계가 복수로 결합되는 과정의 유형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 때, 특정한 역사·사회적 상황에서 빈번한 행위와 관계의 원리는 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밀착 관찰에 기초한 심층적인 의미 파악의 대상이 된다.<sup>(12)</sup>

특정한 역사·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성원, 집단, 조직들 사이에 자주 관찰되

(11) 이를 국가와 농민의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로 볼 수도 있겠다 (Chang, 1992).

(12) 이것은 기어츠가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라고 부르는 방법에 가깝다. 기어츠는 “주관주의와 신비주의는 피하고, 상징적 형태들의 분석을 위해 일상생활의 대중적 세계인 실제 사회적 사건들에 최대한 밀착하고, 맹목적 과학에 대한 추종으로 理論的 공식과 記述的 해석의 연계성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분석을 실시할 것”(Geertz, 1973:29-30)을 주장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사회현상이 화석화되지 않고 원래의 현실적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그 원리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물론 실존하는 다양한 사회성원·집단·조직들은 내재적 특성과 구체적 시간·공간적 조건을 반영해 극히 잡다한 종류의 행위와 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성원·집단·조직들에 대한 반복적 관찰을 통해, 단순 소음(noise)에 불과한 요소들을 걸러내고 몇몇 보편적인 행위와 관계의 이념형(ideal type)을 찾아낼 수 있다.<sup>(13)</sup> 이같은 이념형적 행위와 관계가 발견되는 것은 반드시 개별 성원·집단·조직들이 모두 동일한 존재 조건이나 인식구조를 가졌기 때문은 아니다. 다양한 인식·존재 양태를 갖는 성원·집단·조직들이 교육·모방·압력·기만 등의 사회적 과정에 의해 공통적인 종류의 행위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sup>(14)</sup> 만일 이러한 사회적 또는 거시적 과정이 존재한다면, 개별 성원·집단·조직들로부터 구체적으로 관찰된 미시적 행위와 관계는 이미 거시적 구조의 체현이므로 이 측면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다.

행위와 관계가 복수로 결합되는 과정의 유형들은 실로 다양할 수 있으며. 왜 특정 사회현상이 특정 유형의 결합방식을 갖느냐는 문제는 현재의 이론 수준에서는 발생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sup>(15)</sup> 결합 유형이 다양한 것은 경제학에서 제시되는 단순 집적(simple aggregation)외의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위와 관계가 복수로 결합되는 유형들은 관련된 사회현상들의 특수성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비교적 많이 제시되거나 인정되어 온 결합 유형들 가운데 필자의 사회주의 개혁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sup>(16)</sup>

(13) 이같은 이념형적 행위나 관계의 존재는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에 도입한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household)'나 '대표적 기업(representative firm)'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이천표, 1994). 대표적 가계나 대표적 기업은 각각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조건하에 일정한 방향으로 필요한 경제적 결정들을 내린다고 한다. 이러한 전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일반에 채택되는 것과 같다(Wippler and Lindenberg, 1987).

(14) 행위와 관계의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베버의 이해(Verstehen)사회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복수의 개인들의 행위와 관계도 서로 동질적일 수가 없다. 그러나 연구자의 밀접하고 창의적인 검토를 통해 다수 개인들의 행위와 관계에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이다(Münch and Smelser, 1987: 378). 이러한 보편적인 속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거시적인 요소로 규정할 수도 있다.

(15) 이것을 '질서의 무질서적 발생'으로 보고 혼돈(chaos)이론에 연결시키면 행위와 관계의 다양한 결합 유형들의 존재성에 대한 더이상의 이론적 고찰은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연구 수준을 넘는 문제이므로 평가는 생략한다.

(16) 여기에 제시된 사항들은 필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지만, 이에 관련해 Munch and Smelser(1987), Cook(1991) 등의 논의를 참조.

먼저 동질적 유형의 행위·관계가 복수로 주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합 방식은 단순 집적(simple aggregation), 확산(diffusion 또는 contagion), 무효화(nullification), 유발(inducement 또는 provocation) 등이 있다.

- (a) 단순 집적은 동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복수로 결합되어 원래의 개별적 성격이 주어진 정도만큼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A+A=2A$ ).<sup>(17)</sup> 예를 들어, 국민 개개인의 생산활동의 결과가 그대로 합해져 전체 국민 소득(GNP)을 이루거나 개별 가정의 출산율이 합해져 전국적 평균 출산율이 나타나는 현상이 해당된다. 단순 집적은 주로 경제학에서 ‘주관이 배제된’ 경제적인 행위를 다루는 논리이며, 집적의 결과는 일정한 ‘사회적 비율(social rate)’로 표현할 수 있다(Münch and Smelser, 1987:377). 그런데 콜멘(James Coleman, 1987)은 경제학적 단순 집적의 논리가 사회조직의 작용, 전략적 상호작용 등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es)’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사회현상만을 설명한다고 지적한다.
- (b) 확산은 동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복수로 결합되어 원래의 동일한 개별적 성격이 주어진 정도 이상으로 증폭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A+A=3A$ ). 확산의 예를 들면, 일부 개인들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생활양식이 주위의 모방으로 사회 전체로 퍼지는 신문화 유행의 현상, 선거유세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우세가 드러나면 이른바 ‘死票 방지 심리’에 의해 부동표가 그 후보에게로 몰리는 현상이 해당된다. 확산이 단순 집적과 다른 것은 개인 차원의 특성만을 고려해서는 집단 전체적으로 나타난 사회현상의 정도를 설명할 수 없으며 개인들의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회현상의 증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c) 무효화는 동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복수로 결합되었을 때, 그 결합된 행위나 관계의 일부만이 사회적인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효력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A+A=A$ ). 무효화의 예를 들면, 선거, 입시, 토지 투기에 서처럼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이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의 후보자들이 비슷한 노력을 하지만 그 중 일정수 외에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상이 있다.<sup>(18)</sup>

---

(17) 여기에서 ‘단순’의 의미는 아래에 소개될 다른 결합유형들도 다수 개개인들의 행위와 관계가 집적되는 과정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기 위해서이다.

(18) 이 때 추구 대상의 자원이나 지위가 한정된 것은 자연적인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제도의 결과일 수도 있다.

(d) 유발은 한 종류의 행위나 관계가 누적적으로 발생할 때 이것이 자극이 되어 다른 종류의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A+A=2A+B$ ). 유발의 예를 들면, 혼인연령기의 농촌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기회를 찾아, 하나 둘 이촌향도를 하게 되면 농촌 청년들이 비자발적 독신 사태를 겪고 이를 피하기 위해 결국 동반적으로 이촌향도를 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sup>(19)</sup>

다음은 서로 이질적인 유형의 행위나 관계가 주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합방식으로 조합(combination), 동화(assimilation), 흡수(succusion), 상쇄(offsetting), 상호촉진(escal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융합(fusion) 등이 있다.

(e) 조합은 서로 이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어 원래의 개별적 성질을 각각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성체를 형성하는 현상이다( $A+B=A+B$ ). 조합은 구성요소들이 수평적으로 공존(coexistence)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 지배(domination)관계를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분업을 예로 들면, 뒤르켐류의 기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 개개인의 다양한 직업활동이 수평적으로 조합되어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기초로 한 공존상태에 있는 것이고, 마르크스류의 계급론 관점에서 보면 생산수단의 소유자(자본가)와 생산자(노동자)가 수직적으로 조합되어 착취의 지배관계를 갖는 것이다.

(f) 동화는 서로 이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일부가 원래 성질을 잃고 다른 부분의 성질과 같아지는 현상을 현상을 말한다( $A+B=A+A$ ). 동화의 예를 들면, 미국같은 다민족 사회에서 유색 소수민족 성원 개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되어, 주류 백인들의 그것에 닮아 가는 현상이 해당된다.

(g) 흡수는 서로 이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일부만이 사회적인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효력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A+B=A$ ). 흡수의 예를 들면, 사회적 여론 형성에 있어 소수 엘리트의 의견이 그것과 상이할 수 있는 기층 대중 개개인의 의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h) 상쇄는 서로 이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서로의 성질을 약화시켜 각각의 존재성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되는 현상

(19) 이 때 여성들이 이촌향도 하는 과정에서 확산의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다( $A+B=A-|B|$ ). 상쇄의 예로서 경제발전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들어보자. 경제발전에 따라 한편으로는 소득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이 전강상태와 (자녀양육에 관한) 재정능력의 제고를 가져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 및 취업 기회의 향상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때, 개인 및 사회의 출산율은 이같은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로서 나타난다.

- (i) 상호촉진은 서로 이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서로의 성질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그 행위나 관계들이 각각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A+B=2A+2B$ ). 상호촉진의 예로서 막스 베버가 연구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의 상호관계를 들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은 각각 나름대로의 형성 과정을 거치지만, 시민계급 성원의 역사적 행위 속에서 두 요소 사이의 이른바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이 작용해, 상대 요소를 강화·확산시켜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다.
- (j) 상호작용은 서로 이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결합된 요소들 외에 새로운 다른 제3의 성격의 행위나 관계가 함께 발생하는 현상이다( $A+B=A+B=C$ ). 상호작용의 예를 들면, 시민들이 다양한 정당 이념에의 노출의 결과로 원래는 없던 새로운 합성적 정치이념을 개발함으로써 정당이념의 종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 (k) 융합은 서로 이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결합된 요소들의 원래 성격이 없어지고 새로운 제3의 성격의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A+B=C$ ). 융합의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족중심주의적 태도와 자본주의의 이기적 경쟁주의가 결합되어 이른바 '가족이기주의'적인 태도와 행위가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만연해 있는 현상이 있다.

이처럼 개별적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어 거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은 그 결합과정을 명시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거시적 현상의 기초로서 미시적 요소들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거시적 현상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거시적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인과분석을 위해서는 행위·관계의 다양한 결합유형 자체가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요소들에 대해 나타나는지를 법칙적으로 규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 학문 수준에서 완결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며, 더욱이 미시적 분석의 대상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러한 유형들

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시적 또는 구조적 조건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거시-미시 현상의 설명이 순환논리에 빠져들 위험성도 있다.

결합방식 유형화의 의의는 오히려 즈나니에키(Thomas Znanieki)가 지적한 ‘분석적 귀납(analytic induction)’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20)</sup> 즉 거시적 현상에 대한 실제 경험적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관계의 결합방식들을 염두에 둠으로써, 그 거시적 현상의 발생을 단순 기술(description)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미시적 요소(행위·관계)들을 추출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요소들의 추출은 연구 대상인 거시적 현상이 다른 거시적 현상들과 어떻게 관련·구분되는지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sup>(21)</sup>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관계의 결합방식을 유형화하는 것은 미시적 요인의 보편성을 내세우는 미시 환원주의(micro-reductionism)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다음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sup>(22)</sup>

첫째, 개인들의 행위나 관계는 ‘사회적 진공상태(social vacuum)’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범, 관습, 제도, 상징체계, 사회적 지식과 가치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요소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그것들에 의해 통제된다. 파슨스(Talcott Parsons)는 그의 체계이론에서 프로이트와 뒤르켐의 논의를 결합한 ‘초자아(superego)’의 개념을 사용해 이러한 사회적 환경요소들이 개인들에 내재화(internalization)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개인들의 행위와 관계가 본원적으로 사회질서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Münch and Smelser, 1987: 380-381). 언어를 비롯한 사회적 상징체계가 개인들의 의식과 행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구조주의 이론에 의해 자세하게 논의되었다.<sup>(23)</sup> 사회제도의 개인 행위에 대한 영향

(20) 심리학자인 즈나니에키의 입장은 사회학 연구에 수용하는 루쉬마이어(Rueschemeyer, 1990: 30)에 따르면, “분석적 귀납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정교한 역사적 설명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의식적이고 규율있게 사용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더 명확한 분석적 정향을 갖는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유된 분석적 관심사를 갖고 시작하며, 하나나 몇몇 사례에 대한 이해로부터 일반화 가능한 이론적 지혜를 발전시켜, 이를 다른 구체적인 사례분석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증·재검증한다.” 즉, 분석적 귀납은 사회학에서 해석학적 전통과 실증주의적 접근을 접목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1) 이러한 점은 콜맨(Coleman, 1987: 157)이 “훌륭한 사회사(good social history)”로 부르는 작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22) Coleman(1987), Alexander(1987) 등의 논의도 함께 참조.

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접근의 정의적 요소(definitional element)이며, 이른바 제도학과 경제학은 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경제변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예를 들어, North, 1990; Williamson, 1975).<sup>(24)</sup> 경제학적 사고에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정치학자 엘스터(Elster, 1991: 45-46)조차도 경제학 등에서 채택하는 개인 행위의 미시적 합리성에 기초한 설명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줄 수 있는 사회학적 대안이 사회규범의 중요성을 통해 찾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범, 관습, 제도, 상징체계, 사회적 지식과 가치 등의 사회적 환경요소들은 그 자체의 형성에 미시적 요인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일단 형성된 이후에 뒤르켐이 지적하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 되어 개개인의 의지나 행위에 상관없이 집단적 차원에서 재생산되고 있음이 그 동안의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개인의 행위와 관계는 다수의 개인들이 모인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사회생태학적 조건(social ecological conditions)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생태학적 조건은 넓은 의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회적 환경요소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관계의 사회적 의미가 통용되는 집단의 경계(boundary), 규모(size), 하위집단별 분포(distribution of sub-groups) 등의 비문화적 혹은 물리적 조건들을 지칭한다.<sup>(25)</sup> 그 동안의 연구에서 알렉산더(Alexander, 1987: 305)가 집단 경계의 유동(고정)성의: 올슨(Olson, 1965)이 집단의 규모의: 메이휴(Mayhew, 1980: 1981)가 개인간 연결망 범위와 구조의: 콜맨(Coleman, 1987: 166)이 하위집단별 분포의 개인 행위와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85: 1986)의 선도로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조직과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많은 경우 기존의 사회학적 개

(23) 알렉산더(Jeffrey Alexander, 1987)는 이 문제를 거시-미시 연계 차원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24) 콜맨(James Coleman, 1987)은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현상으로 이해되는 시장에서의 재화 교환조차도 그 양상이 사회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역으로 일군의 학자들이 사회제도의 적합성·우열성을 개인 수준의 합리적 선택 모형(rational choice model)에 입각해 평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예를 들어, Popkin, 1988; Puterman, 1988; Bates, 1981).

(25) 순수한 자연환경 역시 인간들의 사회적 행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생태학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렌스키(Lenski, 1970)는 자연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이는 다시 사회조직과 인간관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념틀 속에 체계적으로 수용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신 사회지리학·사회생태학·사회인구학 등 관련 학문과의 사이에 태동한 학제적 접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에서 뿐 아니라 개인들의 정치·경제적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상시하는 자유주의 질서하에서도 각종 사적 행위나 관계에 대한 거시적 조절·통제의 필요성이 상존한다. 사회적 상황과 대상 영역에 따라 자유로운 개인들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합리적 행위의 합이 집단 전체에 대해 부정적 혹은 비합리적 결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시적 조절·통제의 필요성이 (흔히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의 선도하에) 집단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거시적 조절·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은 공동체(community)나 광의의 의미의 국가(state) 제도의 형성·유지에 핵심적인 이론적·이념적 기초를 제공한다.<sup>(27)</sup> 이러한 국가의 중요성은 동서양의 정치사상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으며, 현대의 좌우파 사회과학 이론에서도 체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sup>(28)</sup> 앞서 거론한 제도학과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의 케인즈적 수정론, 그리고 밀리밴드(Ralph Miliband, 1969) 등 일군의 네오맑시스트들에 의한 기능주의 국가론이 대표적인 논의이다. 공동체나 국가 조직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면, 여기에서 본원적으로 거시적인 조절·통제의 행위가 일정한 미시적 주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sup>(29)</sup> 이에 따른 거시적 조절·통제가 많은 미시적 행위와 관계의 발생과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양한 거시적 현상을 직접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소속 조직의 성격 및 규모, 사회적 비중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 행위의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이 구분될 수 없는 사적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시장경제에서의 독과점 기업, 범산업적 조직을 갖춘 노동조합,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시민운동 단체, 대중적 카리스마를 갖는 정치인, 지역사회의 엘리트 등 각 영역과 지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비록 미시적 차원의 개별적 이해관계 등을 따르는 것일지라도 그 결과가

(26) 같은 개인 합리성의 사회적 부작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인 논의가 특히 제3세계 발전문제에 관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예를 들어, Bates ed., 1988). 본고에서 논의될 중국의 개혁에 관해서도 개인 합리성의 사회적 부작용을 거론하는 연구가 많다(Popkin, 1988; Lee, 1991).

(27) 국가의 영토적 한정성에 초점을 맞추면, 위에서 거론한 사회생태학적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28) 국가론에 관한 엄청난 종류와 양의 문헌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Held et al. (1983); Evans, Rueschemeyer, and Skocpol(1985).

(29) 물론 공동체나 국가의 대리인(agent)들의 활동과정에 다양한 미시적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분석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해당 집단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 과정을 수반한다.<sup>(30)</sup>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약한 일반인들의 개별적 미시적 행위가 본원적 거시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시행위자들의 행위논리는 거시행위자들의 행위논리에 의해 무시·왜곡되기가 쉽다. 본원적 거시행위자들이 존재하면 이에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한 순수한 미시적 차원의 분석은 제한된 의의만을 갖게 된다.

다섯째, 권력관계(power relations)의 존속은, 개별 행위나 관계의 미시적 합리성이 거시적인 차원의 지배·착취 상태를 은근시킬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권력은 흔히 타인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를 행위합리성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권력은 고립된 개인들이 그들의 단기적 이해관계를 좇아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권리소유자에 대한 예속 상태가 오히려 강화되도록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는 특히 사회관계 형성의 개인적 자유를 표면적으로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회질서(liberal social order)'의 핵심적 측면이다.<sup>(31)</sup> 권력관계란 고립적으로 단기적 이해를 추구하는 피지배자의 미시적 합리성이 억압·착취 구조의 강화라는 지배자의 거시적 합리성을 충족시켜, 결국 피지배자에게 거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본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미시적 행위나 관계의 분석이 그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는 거시적 조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고는 사회현상에 대한 완결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지적한 제도·규범·상징체계 등 사회환경적 요소들의 작용, 집단의 규모, 내부 분포 등 사회생태학적 조건들의 영향, 집단적 보편 이익의 증진을 위한 개인 행위의 공동체적 혹은 국가적 조절과 통제, 본원적으로 거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적 행위자들의 존재, 권력관계의 표현인 피지배자의 미시적 합리성의 지배자의 거시적 합리성에 대한 종속 등의 현상은 오늘날 어떠한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조건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0)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 표어를 통해 드러나듯이 거시적 영향력이 공식화되어 있다.

(31)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의 분업과 제조업의 분업은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자율적 당사자들 사이의 분업인 반면 후자는 일방의 이익을 위해 그 권위 하에 이루어지는 분업이다(Rueschemeyer, 1986: 10-11). 후자에서 비록 노동자들이 표면적인 자유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극심한 생활고와 동료노동자와의 경쟁하에서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상실하고 자본가에 굴종하게 된다고 한다.

### III.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거시적 현상으로서의 중국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분석하기에 앞서 개혁 이전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 시각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석 시각들 가운데 사회주의 체제의 장·단점이나 효율·비효율성과 관련해 중시되는 미시적 또는 거시적 측면들이 있으면 개혁 과정에서 이 측면들에 관련된 변화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 이전에 미시적 (또는 거시적) 문제가 중요했었다고 해서, 개혁이 순전히 미시적 (또는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시적 요인일지라도 다시 거시적 변수들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고 거시적 요인일지라도 미시적 조건들에 의해 완화나 강화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 노력은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의 발생 차원의 반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더욱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의 발생 원천으로서 개혁 대상인 차원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중국의 실용주의 정치지도자나 이를 이론적·이념적으로 찬양했던 서구의 자유주의 학계와 언론은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적 생산체제의 문제점을 주로 미시적 차원에서 파악했다. 이 미시적 차원의 문제는 주로 작업 유인력(work incentive)의 문제와 이에 관련된 작업 관찰(work monitoring)의 문제로 집약된다(장경섭, 1992; Chang, 1994b; Puttermann, 1988; Popkin, 1988). 비록 집단생산체제의 도입은 혁명에 따른 사회주의 이행이라는 거시적 변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제도에는 작업 유인력과 관찰에 관련해 농민들의 작업태도를 이완시키는 미시적 부작용이 있었고 이 미시적 문제는 다시 국가 전체의 농업 생산성의 침체라는 거시적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작업 유인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生産隊를 단위로 하는 집단적 생산과정에서 농민(隊員) 개개인의 작업성실도의 차이를 물질적 보상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고, 궁극적으로 생산단위 및 국가 수준의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生產隊는 집단 생산물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별 기본 생계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식구수에 의한 평등 배분을 실시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가구의 성원들이 연간 작업해 얻은 작업점수(功分)에 비례한 배분을 실시했다. 이 때 功分은 기본적으로 작업 시간에 근거했기 때문에 동일 작업시간에 나타

날 수 있는 작업성실도 내지 작업능력에 따른 생산 기여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32)</sup> 이에 따라 농민들은 눈가림으로 게으름을 피우며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는 무임승차꾼(free-rider)이 되었고 농업 생산성은 침체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sup>(33)</sup> 여기에 덧붙여 벼나 밀의 재배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개별 농민들의 작업태도를 작업현장에서나 혹은 수확물을 통해서나 제대로 관찰·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임승차꾼들을 가려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된다.<sup>(34)</sup> 요약하면, 사회주의적 집단생산체제는 功分제도를 통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차원의 문제인 노동의 질(quality of labor)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중국내 실용주의자들의 공론이자 외부 자유주의자들의 부추김이었다.<sup>(35)</sup>

이같은 시각에 대한 반론은 반드시 정통파 사회주의자들에게서만 나오지는 않는다. 집단농업 내부의 미시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의 거시경제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시각이 있다(Puterman, 1983; Chang, 1992). 만일 한 국가나 지역내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포기될 수 없는 정치적 원칙이라면, 불필요한 실업상태를 방지하며 생계보장비만 지출하는 것보다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전부 생산과정에 동원해서 국가나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하의 인구과잉 사회에서는, 농업 부문에 토지-노동력 사이의 생산요소 불균형이 발생할 때, 개별 단위의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조직체가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피해 농촌 인구를 대량 실업 상태로 만들 위험이 상존한다.<sup>(36)</sup> 이는 종속이론적 시각의

(32) 연령·성별에 따른 작업기여도의 차이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평가하였다.

(33) 웅거(Unger, 1985)의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가 농민사회 내부의 협력과 갈등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했다고 한다. 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작업 과정에서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농민사회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거시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기초로서 작용한 것이다.

(34) 예를 들어, 집단 모내기 도중 한 농민이 얼마나 모를 충실히 심어나가는지 일일이 식모 상태를 점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확기에 수확물의 어떤 부분이 그 농민의 모내기 작업노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Popkin, 1988).

(35) 농민들이 집단작업에 불충실했다는 주장은 그들이 가구별로 자체 경작·처분하는 텃밭(自留地)에서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관측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농지 부족(노동력 과잉)을 감안하면, 自留地에서 농민들이 기본 식료품의 자체 조달을 위해 열심히 일하더라도 生產隊 차원에서 노동력 부족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Chang, 1994b).

(36) 인구과잉의 경제학적 정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생계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가치에 못미칠 정도로 토지에 비해 인구가 많은 상태이다.

많은 연구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듯이, 실제 서구 농업자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중남미와 동남아에서 나타났던 사실이며 일부 농업자본가의 단기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많은 농민들의 안정적 고용이 파괴되고 사회의 농업 총생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모든 농촌인구의 지역별 집단농장에 의한 완전 고용은 정치적 원칙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된다.<sup>(37)</sup>

따라서 개혁 이전의 중국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확립되었던 사회주의 체제원칙은 개별 생산단위(生產隊) 차원에서 절대 고용과 보편적 생계 보장의 미시적 행태를 유도했고, 이는 다시 1950년대 이후 30여년간 사회주의체제를 지속시키며 나름대로 전체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 대부분 인민들의 물질적 생존을 가능케 한 중요한 거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人民公社는 단순히 생산단위가 아니고 소속 주민들의 기본 사회·경제적 욕구를 집단적으로 충족시키는 생활·소비 단위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는 이같은 경제단위들의 복합적 성격에 기초해 인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생산체제 내부에서 사전적으로 충족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하에서는 독립적 사회보장체제의 필요성이 근원적으로 부정되며, 대신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선별적이고 임시적인 구호활동 정도가 전개되었다(Dixon, 1980; Chang, 1993b). 각 경제단위의 생산·복지 결합성은 그 단위 차원에서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총고용과 총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며 나아가 정치·사회적 안정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

끝으로 중국 농촌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는 농업 생산조직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人民公社와 그 하부조직들이 이전의 기본 농업생산체였던 농가보다는 훨씬 현대적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대단위 경지정리, 저수지를 비롯한 각종 농촌 생산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 영농의 기계화 및 과학화 등 이른바 녹색혁명의 주요 과업들이 기존의 영세자작농 체제에서는 모두 여의치 못했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거시적 농업 현대화 의지를 미시조직적 차원

(37) 그런데 조지스큐-뢰겐(Georgescu-Roegen, 1960) 같은 경제학자들은 인구과잉 사회들에서의 가족농업의 영속성을 마찬가지 논거로 설명한다. 즉 농가도 이왕 모든 식구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면, 일정 농지만 주어지면 집단농장처럼 모든 성원들을 경작과정에 참여시켜 총생산성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같은 인구과잉 사회에서는 집단농업이든 가족농업이든 모든 농촌인구가 소속 지역이나 가구에 의해 완전 고용되어 개별적 생계가 안정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나아가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는 생산체제가 필요 한 것이다(Putterman, 1983; Chang, 1992). 다음 절에서 지적하겠지만, 이는 개혁 이전의 生產隊농업과 개혁기의 가족농업 사이에 이른바 '생산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 차원의 연속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에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작 소농이 아니라 규모가 있고 조직화된 농업을 할 수 있는 人民公社였다. 거시적으로 추진된 농업 현대화에 의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위에서 지적한 집단생산 과정에서의 미시적 작업 유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이상으로 컸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힌튼(Hinton, 1990)같은 비판적 지식인이 일찌기 개혁 농정에 대해 현대적 조직농업체제를 봉건적 소농체제로 회귀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비슷한 판단이 1980년대 후반부터의 농업생산성의 극심한 불안 정화에 대한 중국내 원인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개혁 이전 중국 농촌경제의 문제점은 농민 경제활동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몇 가지 사회 경제정책에 관해서 더욱 심각하게 제시될 수 있다(Lardy, 1985; Chang, 1992). 중국 공산당 정권은 다른 어느 사회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 추진력을 도시산업부문에서 찾으려 했고, 이에 따라 對농민·농업 정책 중 많은 요소들이 도시산업 위주의 성격을 띠었다. 특히 세 가지 정책이 농민의 장기적 이익을 결정적으로 희생시켰다. 첫째, 인구이동 및 도시화에 관한 정책이다. 1950년대를 제외하고는 개혁 직전까지도 농민들의 도시 이주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었으며 심지어는 잠재적 실업인구인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下放까지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의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민들은 건국 당시 4억 인구를 위해서도 부족했던 농토 위에서 개혁 직전 8억 인구가 연명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이다. 둘째, 강요된 주곡생산하에서 농업경영 다각화 및 부업을 통한 소득증대 기회가 상실되었다. 대외적 식량안보, 농촌의 자체 인구부양, 도시용 식량의 저가 안정 공급 등을 이유로 농촌 생산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몇몇 식량작물 재배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농촌경제는 주곡생산 외의 부문은 거의 사라져버린 기형적 모습을 갖게 되었다. 셋째, 재배가 강요된 농산물의 가격마저 도시 산업자본 축적, 노동자 생계안정 등을 위해 인위적 국가정책으로써 장기간 낮게 유지되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농산물 수매가는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이에 반해 공산품 가격은 꾸준히 인상되었다.<sup>(38)</sup> 이농의 자유가 박탈되고 심지어 재배작물의 종류까지 제한된 상태에서 농산물의 저가 수매는 농민들에게 만성적 좌절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농민들이 이같은 불리한 국가정책으로 인해 감수했던 엄청난 기회비용

---

(38) 이는 국가의 인위적 가격정책으로 인해 鋸狀價格差(price scissors)의 문제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심각했음을 말해준다(Butler, 1985; Nolan and White, 1984).

(opportunity costs)은 개혁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이 완화·포기되면서 농민들에게 돌아온 경제적 기회의 내용과 소득증대 효과를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장경섭, 1992; Lardy, 1985). 개혁 이전에 농민들이 이같은 불리를 어쩔 수 없이 감수했던 것은 人民公社라는 농촌 생산단위의 성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人民公社는 비록 각 지역의 농민들이 모인 지역 단위 생산조직체였지만 애초의 형성과 상시적 통제는 지역 간부들이 당과 정부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人民公社와 그 하부조직들은 한편으로는 지역 농민들의 협동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농민집단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통치기제였다. 이처럼 人民公社는 각 지역 수준의 미시적 정치과정에서 국가의 농민에 대한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다양한 反농민적 거시 사회·경제 정책의 실현을 도왔다. 이러한 반농민적 거시정책은 오히려 앞서 언급된 사회주의의 집단생산체 내부의 작업 유인력의 결여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미시적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른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집단경제체제하에서의 도-농간 인구이동 및 농가 경제활동 다각화의 제한은 농촌인구가 장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가능성에 사전 차단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중국은 루이스(W.A. Lewis, 1954)가 제시했던 '노동력 무한정 공급하의 산업화'라는 풍부한 인구를 기초로 한 잠재적 발전기회를 가졌던 대표적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중국은 다른 대부분의 저개발국들과는 달리 강력한 국제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신식민주의적 경제종속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란(Baran, 1957) 등 종속이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제구조의 왜곡없이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내생적 산업화를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도 있었다. 이 산업화의 미시적 측면을 보면, 농지부족 문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이스 모형에서처럼 새로운 도시산업부문이 생계수준 임금만 주어도 얼마든지 이농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공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화 및 농민들의 도시노동자화 가능성은 집단농업체제하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루이스식 산업화 모형에서는 토착 생계농업의 사회적 안정성을 핵심적 전제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생계농업이 불안정해져 도시지역으로 노동력이 이출되는 속도가 산업고용 창출의 속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경우, 도시지역은 실업과 이에 수반된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안정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민 하나 하나가 산업 노동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주, 구직, 교육 및 훈련 등에 관련된 비용의

대부분을 본인 가족의 생계농업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물론 사회주의 집단농업하에서도 노동집약적 산업화를 추구할 수 있겠지만, 농업에서 도시산업으로 노동자를 적정 속도로 재배치시키고 이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적응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중국 人民公社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Chang, 1993a). 그렇다고 국가의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 과정을 적절히 소화시킬 수도 없었다. 人民公社 체제하에서도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농촌산업화가 추진되었지만, 이는 人民公社 인구의 계절적 혹은 순환적 동원에 의한 임시방편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농촌경제에 자기추동력을 갖는 산업화가 유도되지도 못했고 농민들의 산업노동자로의 사회적 전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 IV. 개혁사회주의의 미시적 기초와 장애

20세기말에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개혁은 예외없이 자유주의적 지향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개혁은 과거 중앙지령경제에 보편적이었던 것과 같은 거시적 정책목표의 관료주의적 실행체제를 점차 포기하고, 대신 다양한 사적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행위와 상호관계가 국가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간접적 유도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적 경제행위자들의 행위와 상호관계의 미시적 논리를 파악하여, 이에 조응한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개혁 자체가 실용주의 정권이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거시적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지만, 개혁의 구체적 과정은 더이상 거시적 정책 결정과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15년간의 개혁 작업이 이미 추진된 시점인 1993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중국의 공식적 개혁이념으로 자리잡게 된 시장사회주의하에서, 국가는 경제발전에 적합한 성격의 경제 조직 또는 행위자들을 형성시키고 이들로부터 일정 방향의 경제행위를 유도해 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장기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과거처럼 정치적 강제나 행정적 통제에 의존하는 대신, 사회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조직·제도·이념·사회관계 가운데 국가의 거시적 정책목표 실현에 이로운 것들을 찾아내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비국가적 경제주체들이 추구하는 미시적 합리성 속에서 국가경제 운용상의 거시적 합리성이 실현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같은 시장지향적 개혁이 과거 사회주의적 경제운용에 비해 얼마나

더 중국의 실정에 적합하고, 어느 정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논란이 있을 것이다.

본고의 관심사인 농촌에 관해서도, 개혁 이전의 사회주의적 집단경제체제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만큼, 개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개혁은 중국 농촌의 기본적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바꿔놓은 엄청난 거시적 변화를 초래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 변화는 人民公社를 대신해 농민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게 된 개별 농가 수준의 미시적 행위와 관계가 다양한 유형으로 결합·축적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人民公社가 해체되고 다시 농촌의 기본적 경제조직으로 부활된 가족농이 개혁 이전의 농업집단체와 비교해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개혁을 평가하고자 한다.<sup>(39)</sup> 특히 그 동안 널리 지적된 사회주의적 집단경제의 문제점들이 개혁기의 가족경제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개혁이라는 거시적 변화가 어떠한 미시적 차원의 조건들을 전제로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의 농촌개혁의 핵심은 包產到戶 및 包幹到戶라는 제도를 통해 농업생산 조직로서의 人民公社가 해체되고 자작농가에 의해 그 기능이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의 사영화는 즉각적으로 뚜렷한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농가는 人民公社(구체적으로 生產隊)과 달리 정치적으로 결정된 원칙에 따라 형성되고 운영되는 국가체제의 하부 단위가 아니라, 사적 개인들이 다양한 물질적·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습화된 사회·문화적 원리들을 쫓아 구성하는 사회생태학적 단위이다. 따라서 농가는 生產隊와 비교해 조직 형태상의 차이점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성립의 기초, 상호작용의 방식이 다르며 대외적으로 국가 등 정치적 조직에 대한 권리·의무의 내용이 다르다. 이 가운데 내부 구성원들, 즉 가족원들 사이의 관계는 운명적 상호부양을 전제로 한 도덕적 집단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이 특성에 의해 농업조직체로서 내재적 생산동기(built-in motive for production)를 갖는다고 여겨진다(Chang, 1992).

즉 정치적으로 결합된 生產隊員들 사이에는 집단 농작업 과정에 언제든지 무임승차(free-riding)를 노리는 태업 동기가 존재하는 데 반해, 협연적으로 결합된 가족원들 사이에는 분리되지 않는 집단적 이해(indivisible collective interests)가 있어서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감독할 동기

---

(39) 여기에 제시된 중국 농촌개혁 사례의 설명은 필자가 수 년 동안 수행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 중 인용된 필자의 논문들에 소개되어 있다.

(incentive for self-monitoring)를 갖는다는 것이다. 만일 이같은 가족농의 특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주의적 미시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업 사영화에 의한 생산성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차야노브 (Chayanov, 1986)가 주장하는 독특한 가족농의 특성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집단농업의 생산 유인력 결여 문제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사적 개인농업'으로서의 개혁기 자작농체제를 평가하는 기준의 시각과 차이가 있다. 가족농업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를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 해석하든 가족 단위의 도덕적 집단 행위의 결과로 해석하든, 개혁기 중국 농업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대는 결국 미시적 행위자인 개개인(농가)의 작업태도가 집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설명된다. 이는 동질적인 행위가 복수로 결합되어 개별적 성격이 주어진 정도만큼 나타나는 '단순 집적(simple aggregation)'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농의 도덕적 경제원리를 인정한다면 인구과잉 하의 농촌 고용과 총생산성 문제에 관해 중요한 함의가 도출된다. 운명적 상호부양을 전제로 할 때 가족농은 가급적이면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성원들을 농사에 참여시켜 농가의 총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특히 농토가 부족해 추가 가족원의 노동이 평균생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더라도 이 가족원을 적절한 부양대책 없이 가정에서 쫓아 낼 수는 없다. 가족농 내부의 이러한 독특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는 사실 사회주의적 집단농업체가 견지하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즉 生產隊 농업 역시 해당 지역의 모든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 생계 안정을 보장받는 체제였다. 중국처럼 인구에 비해 토지 부족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든 도덕적으로 전수되었든 절대 고용과 보편적 생계 보장의 원칙은 타협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개혁은 중국의 모든 농민가족이 식구수 등에 비례해 농지 사용권의 배분을 받도록 했으며, 모든 농촌인구가 가족 단위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한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 및 생산의 극대화, 최저 생존조건의 보편적 보장, 정치·사회적 안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개혁기 중국에서 농업의 탈집단화 내지 사영화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이나마 거시적인 완전고용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개별 가족농의 가족원에 대한 절대고용이라는 미시적 행위원칙이 집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Chang, 1992). 이 역시 동질적인 행위가 복수로 결합되어 개별적 성격이 주어진 정도만큼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단순 집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전체의 농업 총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어 온 것은 부분적으로는 개별 가족농의 절대고용 원칙이 내포하는 개별적 총생산성의 극대화가

집합적으로 실현된 결과이다. 이 과정도 위와 마찬가지의 ‘단순 집적’으로 볼 수 있다.

농촌개혁은 이처럼 각 생산단위에서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라는 미시적 차원의 연속성을 전제로 했지만, 농업생산 여건의 대폭적 개선이라는 거시정책적 차원의 변화도 중요했다. 그런데 가족농이 국가에 대해 갖는 미시적 자율성이 이러한 농업생산 여건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개혁 이전의 人民公社와 그 하부조직들은 한편으로는 지역 농민들의 협동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농민집단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통치기제였다. 반면에 개혁기의 농민가족은 사적 개인들의 사회생태학적 단위로서 조직 운용의 목적이 오직 내부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에만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요구는 그 사적 목적에 부합될 때만 제대로 수용될 것이다. 따라서 탈집단화되어 농민가족이 기본 생산단위로 부활된 중국 농촌에는, 과거 人民公社 체제하에서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던 反농민적 사회·경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미시조직적 기초가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인구이동, 작물구조, 농산물 가격 등에 관한 이전의 정책은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시장원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변화에 기초해서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은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었다(장경섭, 1992).

이와 관련해 개혁기 들어 농촌의 비농업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다. 그러나 人民公社의 해체에 따라 기존의 농촌공업의 조직적 기초가 자연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형태들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Chang, 1993a).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개인 및 가구 단위로 個體戶라는 지위를 얻어 다양한 수공업, 상업, 개인 서비스업을 시작하거나, 소수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私營企業의 형태로 좀더 큰 규모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웃·친척 등 다수의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新經濟聯合隊라는 자격을 얻어 자율적인 집단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기존의 生產隊·生產大隊·人民公社 단위의 集體기업들도 소유권의 일부나 경영권을 개인들에게 이양해 사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형 기업들의 대다수가 鄉소재지나 鎮에 위치하므로 집합적으로 鄉鎮기업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대부분이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향진기업의 개수, 고용 및 생산 규모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개혁기 중국에서 농촌산업의 폭발적 발전에 따라 농촌과 국가 전체의 고용 및 생산 구조가 급변하게 된 거시적 변화는 개별 농가경제의 노동력 및 자원

배치상의 부문다변화(sectoral diversification)라는 미시적 전략에 결정적으로 영향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혁기 농촌산업화의 중요한 특성은 농민들이 산업부문에 대해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조직·기술 등 주요 생산요소의 대부분을 자체 공급한다는 점이다(Chang, 1993a). 농가들이 노동력 및 자본을 농업과 비농업에 신축적으로 동시 배치함으로써 다부문적 경제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국가가 거시적 경제계획의 일환으로써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과 욕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미시적 선택인 것이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행위나 관계가 복수로 결합되어 개별적 성격이 누적된 만큼 나타나는 ‘단순 집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농민들이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에 관한 경험이 지역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집단적 모방이나 학습에 의해 원래의 개별적 성격이 주어진 것 이상으로 증폭되어 나타나는 ‘확산(diffusion 또는 contagion)’ 현상이 실현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농촌산업화에 관련해 덧붙여 고려해야 할 점은 농민들이 부문다변화에 관련된 경제적 자율성을 어떻게 획득했느냐는 문제이다. 30여년간 집단농장 노동자로서 생활했던 중국 농민들이 하루 아침에 농촌산업화를 위한 자본·조직·기술 상의 대응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바로 농업의 사영화에 의해 상당 부분 충족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 사영화는 바로 국가의 농민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장치였던 人民公社가 해체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은 농가경제 운영의 자율적 주체가 되었다.<sup>(40)</sup> 이 과정은 개별 농가들의 자작농화라는 변화가 누적적으로 발생할 때, 이것을 기초로 농가별 비농업부문의 고용과 생산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이 ‘유발(inducement 또는 provocation)’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고려되어 할 현상은, 수많은 농민들이 비농업부문의 노동 및 경영 활동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 농촌의 고용구성으로 본 사회의 계층구조가 급속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별 농민들의 고용과 생산 다변화 전략이 ‘조합(combination)’되어 내부적으로 분화된 농민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sup>(41)</sup>

人民公社 해체로 인해 인민들의 절대고용과 보편적 생계보장을 정치적으로

(40) 한 통계학적 사례분석에 따르면, 농업 사영화의 진전이 농업생산성 향상에는 모호한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농촌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활용을 촉진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Chang, 1993a).

(41) 중국 농촌에서 다양한 종류의 산업부문과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민들 사이의 관계가 ‘수직(지배)적 조합’인지 ‘수평(공존)적 조합’인지 당장 일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보장할 수 없고, 대신에 농민가족이 성원들 사이의 특유의 도덕적 관계를 기초로 한 경제행위로써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개혁기 농민 대상의 사회보장 체제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Chang, 1993b). 앞서 지적한대로 人民公社와 그 하부조직들은 단순히 생산단위가 아니고 소속 인민들의 기본 사회·경제적 욕구를 집단적으로 충족시키는 생활 및 소비 단위였다. 따라서 人民公社의 해체는 생산체제의 탈집단화만이 아니고 복지체제의 탈집단화도 의미한다. 그렇다면 人民公社 해체 이후 농촌의 기본 경제단위가 된 농가가 이같은 생산 및 복지 단위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차야노브(Chayanov, 1986)가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농민가족은 본원적으로 가족원들의 사회·경제적 욕구 충족을 핵심적 행위목표로 삼고 움직이는 복지 중심의 생산단위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가족원들의 절대고용과 생계보장은 각 농가의 당연한 행위원칙이 되며 이에 기초해 人民公社의 사회보장 기능을 적어도 가족원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넘겨받을 것이다. 환언하면, 농가 내부의 미시적 행위원리인 가족원 사이의 상호부양 의무는 개혁기 중국 농촌의 사회보장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농민들이 실제로 처한 복지환경은 더이상 국가지도부의 거시정책적 결정이나 이를 반영하는 집단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sup>(42)</sup> 대신에 농가 내부의 부양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족구조, 재정능력, 부양도덕 등의 미시적 요소들이 중국 전체의 사회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시적 함의를 갖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농민 전체의 평균적 복지 상태는 개별 농가의 그것이 합해진 '단순 집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적 캠페인과 공동체적 압력 등에 의해 농민들의 가족부양 규범이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확산' 현상이 실현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기 농민가족에 의해 유지되는 농업생산과 사회보장의 연속성은 중국의 농촌개혁이 예외적인 사회안정 속에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농민가족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발전노력은 각 농가의 가족구조, 인적 자원 등을 반영한 생활수준 차이 및 계층 분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그리고 국가가 가족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같은 불

(42) 이 점은 농촌경제의 탈집단화 과정에서 별도의 사회보장체제의 확립 노력 대신에, 친족 사이의 상호부양 의무를 확대규정하는 「新婚姻法」을 제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가족들의 자체부양 의무를 강화하며, 가족내 구체적 부양활동 담당자로서의 여성들의 가정적 지위를 미화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역으로 드러난다(김순영, 1993). 즉 이러한 정치적 노력은 그만큼 복지에 관한 국가의 거시적 수단이 한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평등화를 사전 방지하기도 극히 어렵다. 사실, 생산 및 복지 체제를 동시에 가족의존적으로 개편하는 전략은 다양한 사적 경제활동 기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적절한 소득향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많은 농가들에게는 이중적 곤란을 야기한다(Chang, 1993b). 왜냐하면 가족중심적 경제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복지수요를 갖는 집단들은 복지기능 수행에도 가장 부적합한 상태의 가족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기 중국 농촌 복지체제의 미시적 기초가 근본적인 자체 모순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생산조직의 탈집단화와 더불어 추진된 시장기제의 보급은 소득기회 및 소비자원 획득에 있어서 농가들 사이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고 계층 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의존적 경제체제에서 거시적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는 다양한 인적 자원같은 농가들 사이의 미시적 차이점들이 사회적 계층 분화로까지 여파가 확대되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다.

개혁기 중국 농민층 내부의 사회·경제적 계층화는 대체로 개별 농민과 농가의 다양한 인적 자원에 따라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장경섭, 1994).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집단농장의 노동자로서 생활수준과 경제적 자산이 평준화된 상태에서 국가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예외없는 자작농화의 과정을 거친 중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당장 동원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분화 및 불평등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개별 농민과 농가의 인적 자원 동원력이라는 미시적 요인에 기초한 농민사회의 계층화가 전개될 때, 그 초기 과정은 다양한 성질의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어 원래의 개별적 성질을 각각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합체(사회구성체)를 구성하는 '조합(combination)'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조합 가운데는 구성요소들이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관계와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있는데, 개혁에 따른 농민 인구의 사회·경제적 계층화를 기능주의적 시각에서는 수평적 공존관계로, 비판적 갈등론의 시각에서는 수직적 지배관계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보아, 초기 개혁과정은 수평적 공존관계가 일반적이지만, 개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 소득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집단적 계층화 현상으로 누적되고, 이에 따라 계층적 이해갈등 현상이 나타나면 수직적 지배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다.

또 다른 가족의존적 생산·복지 체제의 부작용은 計劃生育, 즉 산아제한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反 멜서스적인 방임적 인구정책 하에서 급격한 출산율 증가를 겪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적극적 산아제한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수준의 "유도된 출산율 전환(induced

fertility transition)"을 성공시켰다(CFEPH 1988). 그런데 1970년대 후반 이후 가족의 존적 생산·복지 체제의 개혁은 각 농가로 하여금 적정 자녀수의 확보와 남아 출산에 민감해지도록 만들었다(장경섭, 1993a). 새롭게 시작된 다양한 농업·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 사회·문화적 의례, 노후 부양 등 모든 측면에서 多產, 특히 아들의 출산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맬서스적 사고를 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집권으로 인구성장 억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른, 산아제한의 강화, 특히 '한 자녀만 갖기' 지침의 강요는 농민들로 하여금 심각한 좌절감과 저항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운 국가적 차원의 인구규모 적정화와 생산·복지 체제의 효율화라는 두 가지 거시적 정책목표가 개별 농가들로 하여금 서로 모순된 미시적 행위원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문제들이 부작용으로서 나타나고 있다(장경섭, 1993a).

예를 들어, 농민들이 피임장치를 비밀리에 제거하는 데서부터 여영아 살해 및 여태아 선별 낙태를 저지르는 데까지 다양한 불법·편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가족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양식으로 농민들이 취학 자녀의 학업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취학연령이 되어도 아예 입학시키지 않고 이들을 가내 일손으로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산아제한에 의한 가족노동력의 부족으로 농촌의 가족중심적 생산활동의 영위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이나 불법적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식 거주지역에서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농민들이 무작정 도시지역으로 몰려들어 도시지역의 이른바 盲流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개혁기 들어 중국 농민들이 새로운 탈집단적 경제환경에 대한 적응전략으로서 가족중심적 생산 및 부양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多產 및 남아선호 규범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농촌의 출산율이 증가한 현상은 한가지 행위가 누적되면서 그 자극으로 다른 종류의 행위가 나타나는 '유발(provocation 또는 inducement)'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존적 경제개혁 정책과 반가족적 산아제한 정책하에서 강요되는 상호 모순된 행위규범에 대한 농민들의 극단적 적응양태로서의 각종 여아학대 행위, 아동 학업중단, 무작정 이농 등이 나타나는 과정은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서 규정할 있다.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행위나 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결합된 요소들의 원래 성격과는 다른 제3의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론, 여아학대, 아동 학업중단, 무작정 이농 등이 사회문제로서 거시적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에 연루된 농민들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집적(aggregation)의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 V. 거시적 조건과 제약

중국 농촌에 나타난 개혁사회주의의 미시적 기초를 검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예외적인 사회·경제적 성공을 거둔 중국의 농촌개혁에 대한 이해가 좀더 구체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개혁과 같은 거시적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서도 미시적 요인들의 체계적 검토가 이론적으로 긴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미시적 요인들의 작용에 대한 조건·제약 변수로서의 거시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미시적 요인들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중국의 농촌 개혁에 대한 충분하고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우선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가족농업과 집단농업의 미시적 연속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촌개혁이 대외적으로 유명한 성공작이 된 근본적 이유는 아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중국 농촌개혁이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을 이전보다 급격히 향상시켰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가 엄청난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고 농민들에 대해 획기적인 경제양보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농산물 수매가의 획기적 인상, 농작물 파종구조의 부분적 자유화, 이농·이촌의 부분적 허용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조정책은 중국 정부의 이전의 도시편향적 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대농민 양보책이었던 것이다(장경섭, 1992). 그리고 농업생산의 탈집단화는 이러한 거시적 정책조정에 수반되었기 때문에 제도상의 혼란 대신 그처럼 즉각적인 농촌 경제사정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농민들이 이전과 같은 정책적 제약상태에서 저가 수매되는 주곡 생산에만 매달려야 했다면, 개별 농가단위의 농작업에서도 별다른 의의를 찾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비록 농업 개혁의 성격이 미시적 차원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도시편향적 농정의 근본적 수정이라는 거시정책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농촌 개혁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개혁기의 농촌산업화가 농민들의 미시적 경제전략에 의해 촉발·지탱되어 왔지만, 그 중장기적인 형태와 성패는 결국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장치, 다양한 거시적 경제조정책, 도시 국유기업과 농촌산업 사이의 구조적 관계, 해외자본의 중국 진출 전략 등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 우선 농촌산업화를 위해 부분적 이농·이촌, 일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재화의 시장교환을 허용한 조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다수의 사영 경제단위들의 조직과 이윤이 급팽창함에 따라 생산수단 소유의 집중과

자본가 계급 대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혁파 지도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심각한 문제제기와 정치적 조치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리고 도시 국유기업에 대한 본격적 개혁작업이 계속 미루어지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놓고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부각되고 있는 鄉鎮企業에 대한 정치적 통제압력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내륙 배후지역으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농촌 산업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鄉鎮企業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농촌 산업화가 진척되어 국가경제적 비중이 커지면 커질 수록 이러한 거시적 변수들의 중요성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농민 복지에 관련해서 중국 농촌사회의 성격을 미시적 행위자인 농민들의 가족부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거시적 정책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농민들의 가족단위의 부양노력의 사회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념적으로 권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1980년에 제정된 「新婚姻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지원하며,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지원”하는 핵가족적 부양관계 뿐 아니라, “친(외)조부모가 부모와 사별한 어린 손자녀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며, 손자녀가 자녀와 사별한 친(외)조부모를 부양하며, 형과 누나가 부모가 별세했거나 능력이 없을 때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등의 확대가족적 부양관계까지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내용을 갖고 있다(Chang, 1993b). 물론 도덕적 부양관계를 형식화된 법적의무(formalized legal responsibility)로서 규정함으로써 공고화시키려는 것은 일면 모순된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혁기 농민복지체계가 농민들의 가족부양에 관한 태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고 있음이 거시적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이에 관련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화 및 계급구조 발생에 대해 단순히 필요악의 차원에서 간단히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빈곤 소외계층의 집단적 발생은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운용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시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의 수직적 분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며 경제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현재로도 중국 인민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가 다양한 정치·행정적 규제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좌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발생과 일부 인민들의 절

대 빈곤은 우선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에 의해 대처될 수 밖에 없으며,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부유계층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실행될 수도 있다.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미시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사회구조에 대해 공산당 지도부와 다양한 사회계층의 집단적 평가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 차이는 결국 정치적인 방법으로 좁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개혁과 가족계획은 각각 개별적이 거시적 합리성에 입각해 국가차원의 정책 결정 및 집행으로서 추구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정책목표가 미시적 행위체로서의 개별 농가로 하여금 서로 모순된 행위규범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장경섭, 1993a). 그리고 이 모순에 대한 미시적 적응방식으로서의 여아학대, 아동 학업중단, 무작정 이농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시 거시적인 중요성을 갖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농민들이 그들의 미시적 적응행태를 자율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개혁 지도부가 인구 및 경제 정책의 상호 조율을 위한 다각적인 거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촌개혁의 제 측면에 대한 이러한 거시적 조건과 제약을 살펴보면, 우선 사적 행위나 관계에 대한 거시적 조절·통제자로서의 국가(state)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비록 개혁이 사적 행위자들의 자율성에 기초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사적 행위자들의 무조건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와 관계의 합이 자동적으로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상태를 갖고 온다는 사고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장경섭, 1993b).<sup>(43)</sup> 농업 사영화, 이농의 조건부 허용, 농촌 공업의 환경 관리, 농민 복지이념의 창출, 빈부격차의 정당화와 통제, 산아제한정책의 조절 등 수많은 영역에서 거시적 조절·통제자로서의 국가의 중요성은 근본적인 것이다. 물론 가족계획의 부작용처럼 이같은 국가의 역할이 언제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나 개별 농민들의 활동은 규범, 관습, 제도, 상징체계, 사회적 지식과 가치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요소들을 활용하거나 그것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가족농의 조직원리는 수 천 년 동안 내려온 사회적 환경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며, 농민들은 이를 실현시키는 일종의 매개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가족원에 대한 절대 고용과 평등소비, 운명적 부양, 남아선호 등에 관련된 규범과 관습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들을 야기하고 있다(Chang, 1992). 그리고 개혁이 비록 이전의

---

(43) 바로 이 점에서 개혁에 대한 중국의 접근적 접근이 러시아 등에서 시도된 이른바 '빅뱅(big bang)' 접근과 구분이 되는 것이다(Zhou, 1993).

사회주의적 혹은 집단주의적 제도들을 개폐하는 과정이기는 해도 기존의 제도들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중국의 농민생활과 국가-농민 사이의 관계를 통제·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생태학적 조건 가운데서는, 중국 인구의 절대 규모, 지리적 분포, 경작지와의 비 등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및 사회 전체의 농민인구 규모와 경작지 면적 사이의 비는 농촌개혁의 동기·과정·결과를 규정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Chang, 1994c). 농업 생산조직의 전환 및 노동집약적 농촌 산업화는 바로 한정된 농지에 대한 지나친 인구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들이다. 그리고 가족계획의 자체 목적 및 경제개혁책과의 모순 역시 이른바 과잉인구의 존재와 관련하여 이해되는 것이다. 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규모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민들의 일상 생활방식 뿐 아니라 국가와의 상호작용의 양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음이 위에서 지적되었다. 인구의 지리적 분포는 도시와 농촌 사이, 내륙과 해안 사이의 그것이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분포의 중요성은 이미 거론한 농촌산업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며, 내륙과 해안 사이의 분포 역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Chang, 1994a).

농촌개혁의 과정에서 (국가를 제외하면) 본원적으로 거시적인 사적 행위자들이 형성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적어도 본고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지역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가 기존의 정치사회학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급속하게 축적한 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간부들이 국가대리인(state agent)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지역적 토호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질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 아울러 농촌 공업이 도시의 대규모 국유기업 뿐 아니라 해외 자본과의 연계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거시적 행위자(체)들은 원래의 형성 과정이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결국 개별 농민들과 다양한 형태의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이러한 권력관계는 일부 지방 농민들의 억압·빈곤·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다(김민영, 1993).

## VII. 결론

1978년에 邓小平 주도로 중국공산당에 의한 역사적 개혁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중국 농촌의 경제구조와 사회질서는 폭발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러

한 변화의 핵심을 지적하면, 각종 경제조직체·사회집단·개인 등 미시적 행위체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왔으며, 이러한 자율적인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예측되었거나 예측되지 못한 다양한 거시적인 변화들을 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혁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농민들의 미시적 행위와 관계의 원리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생산·복지·출산에 관련된 농민가족의 독특한 행위, 관계 원리를 적절히 파악해야 한다. 농민가족 성원들 사이에 유지되는 토착적 사회관계는 단순히 인간본성에 의거해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 사회관계와 이에 기초한 농가경제의 운용방식은 현재 중국농촌의 기본적 생산양식, 산업화전략, 사회보장방식, 사회분화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가설이 이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 기초로서의 개별 농민들의 행위와 관계가 결합되는 다양한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농촌개혁에 대한 좀더 적확한 성격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미시적 기초에 대한 검토가 거시적 변수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시적 조절·통제자로서의 국가·규범·제도 등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소, 인구 규모 및 분포 등 사회생태학적 조건 등 다양한 거시적 변수들의 중요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참고문헌

김민영

1993 “현 중국의 농촌문제: 개혁개방의 부작용.” 『월간 북방동향』 22: 20-26.

김순영

1993 “여성의 지위변화.” 장경섭 편.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pp. 309-356.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김용학

1992 『사회 구조와 행위: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찾아서』. 서울: 나남.

이천표

1994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 경제학에서의 경우.”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3-24.

장경섭

1992 “중국 농업 사영화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4 (1): 199-220.

1993a “중국 농촌의 경제개혁과 인구문제: 計劃生育의 경제사회학.” 『지역연구』 2(2): 23-49.

- 1993b “개혁사회주의의 진로.” 장경섭 편, 『현대중국사회의 이해』. pp. 413-437.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1994 “舊계급, 新계급, 先富계급: 개혁기 중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분화에 관한 연구.” 미발표 논문.
- Akerlof, George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488-500.
- Akerlof, George, and W.T. Dickens  
1982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gnitive Disson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72: 307-319.
- Alexander, J., G. Giesen, R. Münch, and N. Smelser (eds.)  
1987 *The Micro-Macro Lin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lexander, Jeffrey  
1987 “Action and Its Environments.” In J. Alexander, G. Giesen, R. Mü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 153-17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tes, Robert  
1981 *Markets and States in Tropical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tes, Robert (ed.)  
1988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tler, Steven  
1985 “Price Scissors and Commune Administration in Post-Mao China.” In William Parish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pp. 95-114. Armonk: M. E. Sharpe.
- Chang, Kyung-Sup  
1992 “China’s Rural Reform: The State and Peasantry in Constructing a Macro-Rationality.” *Economy and Society* 21(4): 430-452.  
1993a “The Peasant Family in the Transition from Maoist to Lewisian Rural Industrialisa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9(2): 220-244.  
1993b. “The Confucian Family Instead of the Welfare State?: Reform and Peasant Welfare in Post-Mao China.” *Asian Perspective* 17(1): 169-200.  
1994a. “China’s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Economic Reform: A Comparative Reappraisal.” *World Development* 22(4): 601-613.  
1994b. “Rationality and Socialist Collective Farming: A Theoretical Reappraisal of the Chinese Experience.” under revision for *Rationality and Society*.  
1994c. *The Chinese Logic of Rural Reform: Peasant Economy and Surplus Population in Post-Collective Rural Development*.

- forthcoming by Westview.
- Chayanov, Alexander Vasil'evich
- 1986 [1925] *Theory of the Peasant Econom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hina Financial and Economic Publishing House (CFEPH).
- 1988 *New China's Population*. New York: Macmillan.
- Coleman, James
- 1987 "Microfoundations and Macrosocial Behavior." J. Alexander, G. Giesen, R. Mü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 153-17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ns, Randall
- 1981 "On the Micro-Foundations of Macro-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984-1014.
- 1992 "The Romanticism of Agency/Structure versus the Analysis of Micro/Macro." *Current Sociology* 40: 77-98.
- Cook, Karen S., and Margaret Levi (eds.)
- 1990 *The Limits of Rationalit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Dixon, John
- 1981 *The Chinese Welfare System, 1949-1979*. New York: Praeger.
- Elster, Jon
- 1990 "When Rationality Fails." In Karen S. Cook and Margaret Levi (eds.), *The Limits of Rationality*. pp. 19-46.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Evans, Peter,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Georgescu-Roegen, Nicholas
- 1960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12: 1-40.
- Giddens, Anthony
-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London: Macmillan.
-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 1987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 1985, 1986.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s I, II. Cambridge: Polity Press.
- Held, David *et al.* (eds.)
- 1983 *States and Socie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libert, Richard  
1990 "Ethnomethodology and the Micro-Macro Or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794-808.
- Hinton, William  
1990 *The Great Reversal: The Privatization of Chin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Huber, Joan (ed.)  
1991 *Macro-Micro Linkages in Sociology*. Newbury Park: Sage.
- Inkeles, Alex, and David Smith  
1974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rdy, Nicholas  
1985 "State Intervention and Peasant Opportunities." In William Parish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pp. 33-56. Armonk: M. E. Sharpe.
- Lenski, Gerhard  
1970 *Human Societies*. New York: McGraw-Hill.
- Lee, Keun  
1991 *Chinese Firms and the State in Transition*. New York: M. E. Sharpe.
- Lewis, W.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ur." *Manchester School* 22: 139-191.
- Mayhew, Bruce  
1980 "Structuralism versus Individualism: Part I, Shadowboxing in the Dark." *Social Forces* 59: 335-375.  
1981 "Structuralism versus Individualism: Part II, Ideological and Other Obfuscations." *Social Forces* 59: 627-648.
- Miliban, Ralph  
1969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Münch, Richard, and Neil Smelser  
1987 "Relating the Micro and the Macro." In J. Alexander, G. Giesen, R. Mü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 356-387.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lan, Peter, and Gordon White  
1984 "Urban Bias, Rural Bias, or State Bias?: Urban-Rural Relations in Post-Revolutionary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0: 52-81.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and Their Consequences for Economic Performance."

- In Karen S. Cook, and Margaret Levi (eds.), *The Limits of Rationality*. pp. 383-401.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Olson, Mancur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New York: Schocken Books.
- Popkin, Samuel  
 1988 "Public Choice and Peasant Organization." In Robert Bates (ed.),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pp. 245-27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utterman, Louis  
 1983 "A Modified Collective Agriculture in Rural Growth-with-Equity: Reconstructing the Private, Unimodal Solution." *World Development* 11: 77-100.  
 1988 "Group Farming and Work Incentive in Collective-Era China." *Modern China* 14: 419-450.
- Rose, Richard  
 1993 "Contradictions Between Micro- and Macro-Economic Goals in Post-Communist Societies." *Europe-Asia Studies* 45: 419-444.
- Rosenbaum, Arthur L. (ed.)  
 1992 *State and Society in China: The Consequences of Reform*. Boulder: Westview.
- Rueschemeyer, Dietrich  
 1986 *Power and the Division of Labou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Different Methods – Contradictory Results?: Research on Development and Democracy." *Working Papers on Comparative Development* 13. The Center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Brown University.
- Unger, Jonathan  
 1985 "Remuneration, Ideology, and Personal Interests in a Chinese Village, 1960-1980." In William Parish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 117-140. Armonk: M. E. Sharpe.
- Williamson, Oliver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Free Press.
- Wippler, Reinhard, and Siegwart Lindenberg  
 1987 "Collective Phenomena and Rational Choice." In J. Alexander, G. Giesen, R. Münch, and N.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 135-15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